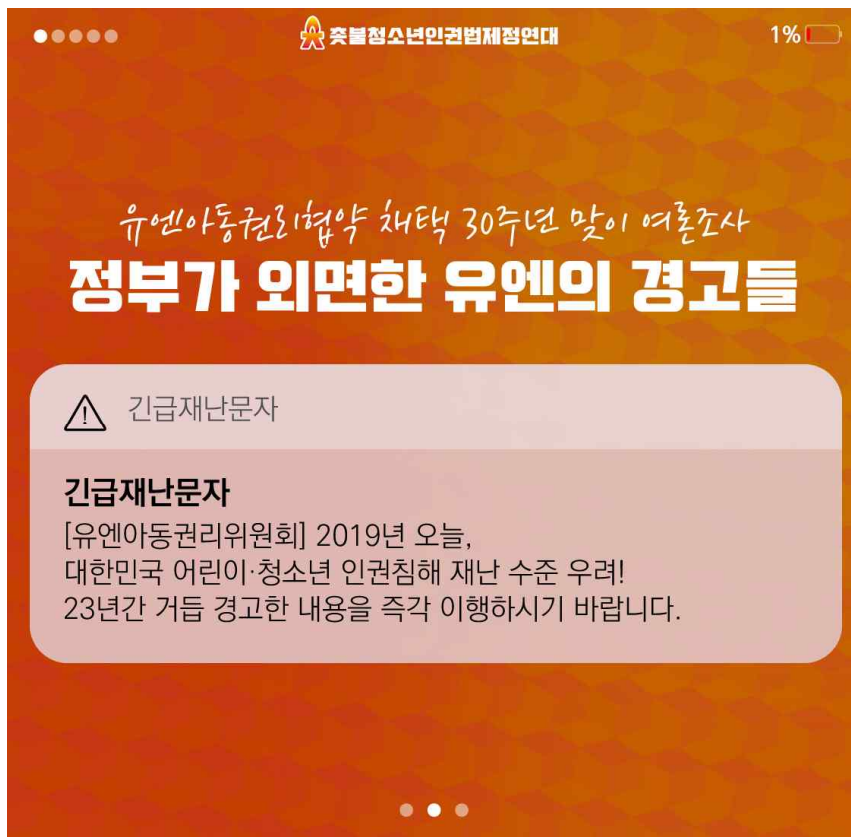
 촛불청소년 인권법 제정연대	수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발신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문의	배경내 공동집행위원장
	발송일	2019. 11. 19. (화)
	제목	'정부가 외면한 유엔의 경고들' 여론조사 결과 보도 요청



총 827명 시민 여론조사 결과 발표
시민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유엔의 경고 1위는 체벌 금지.
그 다음은 무엇이 차지했을까?
시민들이 반드시 이행해야 할 경고로 선정한 최우선과제 5가지는?

1. 평화와 인권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11월 20일 '유엔아동권리협약 채택 30주년'을 맞이하여 11

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특별 여론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3. 이번 조사 항목에는 ▶유엔이 보내온 주요 경고들(한국정부에 대한 권고들) 가운데 시민들의 인지도가 높은 항목 ▶한국정부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최우선 과제 ▶한국정부에 추가로 전하고 싶은 의견이 포함되었습니다.
4. 유엔아동권리협약은 1989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18세 미만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에 관한 국제규범’으로서 한국정부는 1991년 이 협약에 가입했습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지금까지 총 4차례에 걸쳐 한국의 아동인권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끝에 중요한 개선 과제를 한국정부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에 포함된 내용들 가운데 특별금지를 비롯한 상당수의 권고 항목은 최초 권고가 이루어졌던 1996년부터 올해인 2019년까지 무려 23년간 이어지고 있는 해묵은 과제이기도 합니다.
 - ▶ 첫 번째 권고(1996년) : 대한민국 1차 국가보고서 심의 직후 1차 권고
 - ▶ 두 번째 권고(2003년) : 대한민국 2차 국가보고서 심의 직후 2차 권고
 - ▶ 세 번째 권고(2011년) : 대한민국 3·4차 국가보고서 합동 심의 직후 3·4차 권고
 - ▶ 네 번째 권고(2019년) : 대한민국 5·6차 국가보고서 합동 심의 직후 5·6차 권고
5.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아래 촛불청소년연대)는 2017. 09. 26에 출범한 전국 연대체로서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위한 선거·정당관련법 개정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 △학생인권법 제정(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 개정)이라는 3가지 입법운동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정연대에는 전국 374개 단체가 가입하고 있습니다(<별첨자료 3>참고).
6. 국제기준에 맞추어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이 시급히 신장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 드립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세요.
☎ 배경내 공동집행위원장(010-6214-3550)

(끝)

유엔아동권리협약 채택 30주년 맞이, 특별 여론조사
“정부가 외면한 유엔의 경고들”

조사 결과 보도자료

1. 조사 개요

- 조사 기간 : 11월 1일(금)~11월 14일(목)
- 참여 대상 : 청소년, 비청소년(성인) 총 827명 참여
- 조사 방법 : 온라인 설문조사

2. 조사 내용

1) 질문의 구성

- ① 질문1. "이런 것도 있었네?" 유엔이 이런 경고들을 보내 왔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 ② 질문2. "백번 강조해도 모자라다!" 꼭 지켜졌으면 하는 권고 3가지는?
- ③ 질문3. 한국 정부에 하고 싶은 말 또는 "이건 왜 없나요?" (주관식 선택)

2) 질문 항목

① 선정 기준

- 1996년 1차 권고부터 2019년 5·6차 권고까지, 유엔이 한국정부에 보내온 권고들(최종 견해) 가운데 유엔은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으나 한국정부가 이행하지 않고 있는 해묵은 과제들 가운데 주요 항목을 선정하였다.
- 2019년 5·6차 권고에 새롭게 등장하여 시민들에게 널리 알릴 필요성이 있는 과제들 가운데 주요 항목을 선정하였다

※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 연혁

- ▶ 첫 번째 권고(1996년) : 대한민국 1차 국가보고서 심의 직후 1차 권고
- ▶ 두 번째 권고(2003년) : 대한민국 2차 국가보고서 심의 직후 2차 권고
- ▶ 세 번째 권고(2011년) : 대한민국 3·4차 국가보고서 합동 심의 직후 3·4차 권고
- ▶ 네 번째 권고(2019년) : 대한민국 5·6차 국가보고서 합동 심의 직후 5·6차

② 최종 선정된 18개 항목

- 유엔 권고에 무게감을 부여하고, 시급한 이행 필요성을 알려내기 위하여 ‘경고들’이라는 문구로 대체하여 사용하였다.

유엔의 경고들(권고)

- 1. [학생의 학교 운영] 학교는 형식적으로 듣는 척만 말고 학생이 학교운영에 실제로 참여, 결정할 수 있게 하라.

2. [경쟁교육 No] 경쟁과 시험은 교육의 목표가 아니다. 교육 목표를 유엔기준에 맞게 새롭게 정하고 대학입시제도를 고쳐라!
3. [시설 밖으로] 탈가정 아동을 위한 시설들을 꼼꼼하게 살피고 대안적 양육과 돌봄의 질을 높여라. 시설은 최선이 아니니 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폐지하라.
4. [#스쿨미투]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성별에 기반한 폭력과 차별에 주목하라.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와 학대를 방지하고 대책을 마련하라.
5. [체벌은 고문] "맞아도 되는 사람"은 없다! 간접체벌, 징계 등 모든 형태의 체벌을 모든 공간에서 금지하라. 신고하면 제대로 대응하라.
6. [차별금지법 제정]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법률 제정을 서둘러라. 나이, 장애,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등에 따른 모든 차별에 맞서라.
7. [즐거운 교육] 매력 없는 공교육은 교육권을 침해하는 것. 즐겁고 다양한 교육과정을 만들고 학교밖 청소년의 교육권도 보장하라.
8. [선거 연령 하향] 정치 활동은 아동의 당연한 권리다. 만19세인 정당 가입과 선거권 연령을 낮춰라.
9. [stop! 사생활 침해] 아동에게도 사생활이 있다. 복장 제한, 학업 성적 공개, 동의 없는 소지품검사 등 사생활 침해를 멈춰라.
10. [씹히지 않을(들릴) 권리] 규칙과 법을 바꿔 아동이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없이 말하게 하고, 들었으면 적극 반영하라.
11. [죽게 두지 않을 의무] 너무 많은 아동이 죽고 있다. 그것도 자살로. 자살에 영향을 주는 환경(가정, 학교 등)적 원인을 제대로 찾고 대응하라!
12. [청소년노동인권] 일하는 청소년도 노동자다. 최저임금 등 노동기준을 지키고 노동환경을 개선하라. 억지로 일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들어라.
13. [쉽과 놀이] 어떻게 종일 공부만 하니?! 사교육 줄여라. 쉬는 시간, 놀이 시간 늘려라.
14. [난민/이주 아동] 국내 아동과 동등하게 사회보장, 교육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라. 난민과 이주 아동을 함부로 가두지 마라.
15. [이름을 가질 권리] 부모의 체류자격, 결혼 여부 등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은 태어남과 동시에 등록되고 이름을 가질 권리가 있다.
16. [예산 빨랑 확대] 국가 예산은 다 어디로 가고 있나? 경제수준에 비해 아동 예산이 너무 적다. 예산을 대폭 빨랑빨랑 늘려라!
17. [범죄 피해 아동] 범죄 피해 아동을 두 번, 세 번 괴롭히지 말라. 반복 진술, 합의 강요를 방지하고 피해아동에게 친절한 절차를 만들어라.
18. [무상교육 확대] 무상교육은 국가의 의무다! 경제형편에 상관없이 공교육에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무상교육을 확대하라.

3. 조사 결과

질문 1. "이런 것도 있었네?" 유엔이 이런 경고들을 보내 왔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 유엔이 한국정부에 권고한 총 18가지 항목에 대하여 각각 시민들의 인지도 수준이 어떠한지 살펴보기 위하여 인지 여부에 관해 질문하였다.

1) 인지도가 높았던 '유엔의 경고들' 상위 5순위



○ 조사 결과, 시민들이 '이미 알고 있었다'고 답한 항목들 가운데 1순위는 모든 형태의 차별 금지, 2순위는 차별금지법 제정, 3순위는 무상교육 확대, 4순위는 선거연령 하향을 포함한 참정권 보장, 5순위는 #스쿨미투로 대표되는 성별에 기반한 학내 폭력과 차별 대책 마련으로 나타났다. 시민의 인지도가 높았던 상위 5순위 항목은 특히 최근 한국사회에서 중요한 사회 의제로 주목받고 있는 사항인 만큼, 유엔의 권고 내용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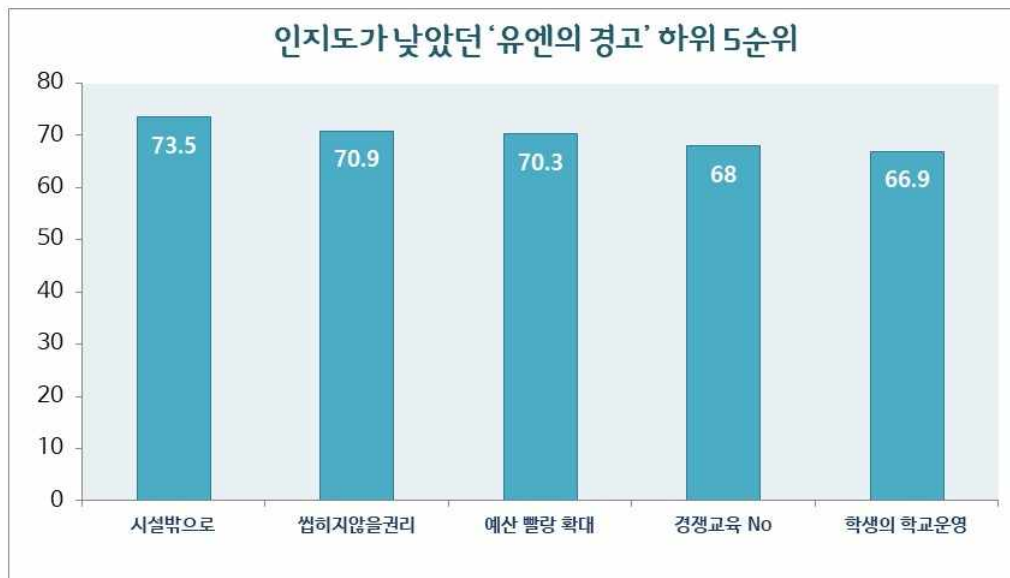
○ '차별은 고문의 일종이며,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라'는 유엔의 권고는 1996년 1차 권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사항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 안에서 도구나 손발을 이용한 차별은 금지되어 있으나, 이른바 '간접차별'까지 금지되는 지에 대해서는 모호한 영역으로 남아 있다.

○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통해 아동의 삶에 스며있는 차별에 맞서야 하며, 사회적 합의 부족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미루는 핑계가 될 수 없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기

위한 적극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일관된 지적이다.

○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19년 5.6차 권고를 통해 현행 19세인 선거권 연령과 정당 가입 연령을 하향하여 아동의 참정권이 보다 폭넓게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스쿨미투로 대표되는 학교내 성폭력과 젠더 차별을 시정할 것을 특별히 강조한 바 있다. 참정권 보장은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 국회를 통해 법률이 개정되어야 하는 사항이나, 정부 역시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학교 안팎에서 청소년 참정권 보장의 필요성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확대하고 민주시민교육을 확대해야 할 책임을 갖고 있음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2)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유엔의 경고’ 5순위



○ 반면, ‘시설의 단계적 폐지’, ‘씹이지 않을 권리’[들릴 권리(the right to be heard) : 아동의 의견을 그저 듣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듣고 그 의견에 비중과 권한을 부여할 것을 의미], 아동 예산의 확대, 경쟁 중심의 교육, 학생의 학교 운영에 대한 의미 있는 참여 등에 관한 유엔 권고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문제라는 것은 알았지만, 이런 내용들이 유엔에서도 권고한 내용인 줄은 몰랐다는 반응들이 주관식에서도 자주 발견되었다.

○ 탈시설 정책은 장애,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새로운 복지 접근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으로서, 아동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정책화 속도가 늦은 분야이다. ‘시설 보호는 아동을 위한 최선의 보호가 아닌 만큼, 단계적으로 시설 폐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 이행하여야 한다’는 권고는 2019년 5.6차 권고에 처음으로 포함되어 시민들의 인지도 역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 ‘경쟁과 시험은 교육의 목표가 아니며, 과도한 경쟁 중심의 교육 환경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것이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지속적인 경고였다. 정시 확대나 수시 확대를 넘어, 경쟁적 교육환경을 바꾸기 위한 교육 정책의 전면적 개편이 요구된다.

○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규정에 따르면, 학생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정식 구성원이 아니며, 필요에 따라 학생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의 의견에 비중과 권한을 부여해야 하며, 특히 공교육인 학교에서 아동이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함을 권고하고 있다.

3) 유엔 권고별 인지도

항목	처음 알았다	알고 있었다
1. 학생의 학교운영	66.9%	33.1%
2. 경쟁교육 No	68.0%	32.0%
3. 시설 밖으로	73.5%	26.5%
4. #스쿨미투	46.7%	53.3%
5. 체벌은 고문	36.9%	63.1%
6. 차별금지법 제정	40.5%	59.5%
7. 즐거운 교육	64.9%	35.1%
8. 선거 연령 하향	46.4%	53.6%
9. stop! 사생활 침해	46.8%	53.2%
10. 씹히지 않을(들릴) 권리	70.9%	29.1%
11. 죽게 두지 않을 의무	61.9%	38.1%
12. 청소년노동인권	47.3%	52.7%
13. 쉼과 놀이	49.0%	51.0%
14. 난민/이주 아동	57.2%	42.8%
15. 이름을 가질 권리	57.4%	42.6%
16. 예산 빨랑 확대	70.3%	29.7%
17. 범죄 피해 아동	61.7%	38.3%
18. 무상교육 확대	43.7%	56.3%

○ 각 항목별 시민들의 인지도는 위와 같다. 전체적으로 유엔의 권고 내용에 대해 ‘처음 알았다’고 시민들이 답한 항목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한국정부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내용뿐 아니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 내용에 대해서도 홍보와 이행을 위한 정책적 노력에 소홀해 왔던 것이 시민들의 낮은 인지도로 연결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유엔 경고별 인지도



유엔 경고별 인지도



질문2. "백번 강조해도 모자라다!" 꼭 지켜졌으면 하는 권고는? (3개 고르기)

○ 한국 정부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유엔의 경고들(권고들) 가운데 시민들이 반드시 이행했으면 하는 과제 3가지를 중복 선택하도록 하였다.

1) 최우선 과제로 뽑힌 경고들



○ 응답자 827명 가운데 '경쟁교육 No'를 최우선 과제로 꼽은 이들은 390명(47.2%)에 달해 절반 가까운 응답자들이 경쟁 중심의 교육 환경의 변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그 다음으로 선거권 연령 하향과 차별금지법 제정을 꼽은 응답자는 각각 264명(31.9%)과 260명(31.4%)으로, 아동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과제로 참정권 보장과 차별금지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그 밖의 유엔 권고들에 대한 비중 부여도

유엔의 경고(권고)	최우선 과제로 꼽은 응답자/응답율
1. [학생의 학교 운영] 학교는 형식적으로 듣는 척만 말고 학생이 학교 운영에 실제로 참여, 결정할 수 있게 하라.	218명 (26.4%)
2. [경쟁교육 No] 경쟁과 시험은 교육의 목표가 아니다. 교육 목표를 유엔기준에 맞게 새롭게 정하고 대학입시제도를 고쳐라!	390명 (48.2%)

3. [시설 밖으로] 탈가정 아동을 위한 시설들을 꼼꼼하게 살피고 대안적 양육과 돌봄의 질을 높여라. 시설은 최선이 아니니 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폐지하라.	121명 (14.6%)
4. [#스쿨미투]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성별에 기반한 폭력과 차별에 주목하라.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와 학대를 방지하고 대책을 마련하라.	208명 (25.2%)
5. [체벌은 고문] "맞아도 되는 사람"은 없다! 간접체벌, 징계 등 모든 형태의 체벌을 모든 공간에서 금지하라. 신고하면 제대로 대응하라.	140명 (16.9%)
6. [차별금지법 제정]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법률 제정을 서둘러라. 나이, 장애,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등에 따른 모든 차별에 맞서라.	260명 (31.4%)
7. [즐거운 교육] 매력 없는 공교육은 교육권을 침해하는 것. 즐겁고 다양한 교육과정을 만들고 학교밖 청소년의 교육권도 보장하라.	136 (16.4%)
8. [선거 연령 하향] 정치 활동은 아동의 당연한 권리다. 만19세인 정당 가입과 선거권 연령을 낮춰라.	264명 (31.9%)
9. [stop! 사생활 침해] 아동에게도 사생활이 있다. 복장 제한, 학업 성적 공개, 동의 없는 소지품검사 등 사생활 침해를 멈춰라.	69명 (8.3%)
10. [씹히지 않을(들릴) 권리] 규칙과 법을 바꿔 아동이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없이 말하게 하고, 들었으면 적극 반영하라.	62명 (7.5%)
11. [죽게 두지 않을 의무] 너무 많은 아동이 죽고 있다. 그것도 자살로. 자살에 영향을 주는 환경(가정, 학교 등)적 원인을 제대로 찾고 대응하라!	151명 (18.3%)
12. [청소년노동인권] 일하는 청소년도 노동자다. 최저임금 등 노동기준을 지키고 노동환경을 개선하라. 억지로 일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들어라.	67명 (8.1%)
13. [쉼과 놀이] 어떻게 종일 공부만 하니?! 사교육 줄여라. 쉬는 시간, 놀이 시간 늘려라.	143명 (17.3%)
14. [난민/이주 아동] 국내 아동과 동등하게 사회보장, 교육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라. 난민과 이주 아동을 함부로 가두지 마라.	36명 (4.4%)
15. [이름을 가질 권리] 부모의 체류자격, 결혼 여부 등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은 태어남과 동시에 등록되고 이름을 가질 권리가 있다.	26명 (3.1%)
16. [예산 빨랑 확대] 국가 예산은 다 어디로 가고 있나? 경제수준에 비해 아동 예산이 너무 적다. 예산을 대폭 빨랑빨랑 늘려라!	55명 (6.7%)
17. [범죄 피해 아동] 범죄 피해 아동을 두 번, 세 번 괴롭히지 말라. 반복 진술, 합의 강요를 방지하고 피해아동에게 친절한 절차를 만들어라.	68명 (8.2%)
18. [무상교육 확대] 무상교육은 국가의 의무다! 경제형편에 상관없이 공교육에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무상교육을 확대하라.	67명 (8.1%)

○ 각 항목별로 ‘중요한 3가지’로 뽑은 응답자 수와 응답율은 위 표와 같다. 상대적으로 응답율이 적은 항목은 응답율이 높은 항목에 비해 사회적 중요도가 낮아서라고 보아서는 안 된다. ‘차별금지법 제정’, ‘선거연령 하향’, ‘경쟁교육 개편’ 등 큰 틀에서의 변화를 통해 견인해낼 수 있는 변화들이기도 하고, 유엔의 권고 어느 하나도 이행을 소홀히 하여서는 안 된다.

질문 3. 한국 정부에 하고 싶은 말 또는 "이건 왜 없나요?" (선택사항)

○ 응답자들로 하여금 한국 정부에 하고 싶은 말 또는 이번 조사 항목에 포함되지 못한 유엔의 권고들(권고들) 가운데 주목해야 할 과제로 생각하는 바를 주관식으로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였다. 총 325명이 제출한 주관식 응답 가운데 한국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할 주요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하기로 한다.

1. 한국 정부에 하고 싶은 말

[이행 촉구형]

- ‘나중에’, ‘국민여론상’이란 말은 그만, 자기네가 하고 싶을 때는 ‘국민의 명령’이란 말 하는 것도 그만.
- UN의 권고를 당장 이행하세요.
- 거듭되는 권고를 계속해서 무시한다면 권고가 아닌 경고를 되돌려 받게 될 것입니다!
-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있음에도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 이렇게 많은 권고사항들 중 단 하나라도 개선되었다는 소식을 꼭 듣고 싶어요!
- 그 외 “유엔의 권고에 책임 있게 답하라”. “무시하지 말고 꼭 실행하라” 등의 응답이 다수를 이룸

[요구형]

- 아동에 대한 정신적 학대가 고문 수준이다. 학교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의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와 차별과 혐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학교 안에서 언론탄압 하지 말라, 권력 남용으로 학생의 외침을 교장 입맛대로 바꾸지 않아야 한다.
- 학교 서열화 폐지! 교육시수와 교육과정의 양을 줄여 학습노동에서 해방시켜라!
- 입시 지옥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아동이 살고 싶은 나라,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 학교에서 학생을 내쫓는 규정을 없애라.
- 학교란 공간 자체를 네모네모 감옥이 아닌 형태로 바꿔라.
- 그 외 “아동인권을 외면하지 말라”, “아동의 권리와 행복을 침해하는 문제들에 맞서

싸워달라”.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학교를 만들어달라” 등의 응답들이 다수 존재

- 선거연령 하향, 참여권 확대, 입시/경쟁 중심의 교육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응답 역시 다수 존재.

[속이 뻥 뚫리는 주목할 만한 문장들]

- 저출생 걱정 말고, 태어나 성장하고 있는 어린이. 청소년 인권 보장하라!

- 유엔의 경고를 학교에 그리고 학생들에게 알려라.

- 님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국제적 흐름’, ‘세계적 추세’, ‘글로벌-스탠다드’인데 왜 안 들어요?

- 언제까지 미루기만 할 겁니까! 차별금지법 즉시 제정하고 학생인권보장 법제화 해주세요!

- 학생이 미래에 이 나라를 이끌어갈 중요한 인물이라면서, 왜 공부만 시키나요? 교육을 시켜주셔야지, 왜 지식을 주입시키시나요? 인간에겐 개인의 자유가 있다면서 왜 화장과 복장, 헤어스타일의 자유는 없나요?

- 지금 성인이 되어 이 나라를 이끌고 계신 분들, 학교선생님들, 부모님들, 대부분이 독재와 인권 탄압에 맞서는 민주시민들의 모습을 보았고 거기에 참여하고 지지하셨을 겁니다. 그렇게 자유와 인권을 외쳤던 분들이, 지금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 비청소년분들, 여러분들은 청소년일 때의 당신들의 모습 앞에서 당당해질 수 있습니까?

- 학교 밖 청소년들의 삶은 가족이나 보호자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가 청소년의 입장을 이해하고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 학교에서는 학생을 성적을 기준으로 차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특정한 기준으로 사람을 차별한다고 생각합니다. (...) 공부 잘하는 학생들만 모아서 특정한 혜택을 주는 것을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2. “이런 건 왜 없지?” 생각하는 것

[이런 게 없다]

- 왜 아동 정치인은 없나요?

- 당사자 중심의 탈가정 청소년을 위한 자립시설은 왜 없나요?

- 나라의 최고 수반인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데, 왜 학교의 수반인 교장은 학생이 뽑을 수 없나요?

- 두발자유, 왜 없나요?

- 아동의 생각과 의견을 담은 제도는 없나요?

- 어린이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쉬고 놀 수 있는 시간, 장소가 없어요.

- 어린이 청소년 인권을 위한 정부 부처가 없다!

- 우리나라에는 왜 차별금지법이 없나요?

[대안+권리 제안형]

- 독립할 권리! 부모님 동의 없애라!

- 가족 또는 제3자에 의한 보호 등의 조건이 없는 ‘청소년 주거권’ 보장!

- 청소년노동인권교육 강화!
- 장애인이 원하는 교육, 장애 차별 없는 교육은 언제쯤 제대로 추진하나요?
- 기후 위기가 아동 권리에 미치는 영향 고려하기.
- 모든 아동의 건강권 보장, 무상 의료를 실시하라.
- 아동 수당은 아동에게!
- 청소년 트랜스젠더의 자기결정권 보장!
- 학생인권법 제정하고, 학생인권 구제 기구를 내실 있게 운영하라.
- 비건 채식 청소년 등 다양한 급식을 제공, 선택권 보장!
- 아동 복지 지원을 확대하고 다문화, 난민 정책을 선명하게 하라.

※ [별첨자료 1] 유엔 경고 항목별 권고 회차

※ [별첨자료 2] 특별 여론조사 홍보용 선전물

[별첨자료 1]

유엔 경고 항목별 권고 회차


* 유엔의 경고 항목 가운데 모든 내용이 포함된 경우 ○로 표기

* 경고 항목 가운데 일부만 포함된 경우 △로 표기


유엔 경고 항목	1차 권고 (1996)	2차 권고 (2003)	3, 4차 권고 (2011)	5,6차 권고 (2019)
1. [학생의 학교 운영] 학교는 형식적으로 듣는 척만 말고 학생이 학교운영에 실제로 참여, 결정할 수 있게 하라.		○	○	○
2. [경쟁교육 No] 경쟁과 시험은 교육의 목표가 아니다. 교육 목표를 유엔기준에 맞게 새롭게 정하고 대학입시제도를 고쳐라!	△	○	○	○
3. [시설 밖으로] 탈가정 아동을 위한 시설들을 꼼꼼하게 살피고 대안적 양육과 돌봄의 질을 높여라. 시설은 최선이 아니니 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폐지하라.	△	△	△	○
4. [#스쿨미투]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성별에 기반한 폭력과 차별에 주목하라.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와 학대를 방지하고 대책을 마련하라.		○	○	○
5. [체벌은 고문] "맞아도 되는 사람"은 없다! 간접체벌, 징계 등 모든 형태의 체벌을 모든 공간에서 금지하라. 신고하면 제대로 대응하라.	△	○	○	○
6. [차별금지법 제정]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법률 제정을 서둘러라. 나이, 장애,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등에 따른 모든 차별에 맞서라.	△	○	○	○
7. [즐거운 교육] 매력 없는 공교육은 교육권을 침해하는 것. 즐겁고 다양한 교육과정을 만들고 학교밖 청소년의 교육권도 보장하라.		○	○	○
8. [선거 연령 하향] 정치 활동은 아동의 당연한 권리다. 만19세인 정당 가입과 선거권 연령을 낮춰라.				○

9. [stop! 사생활 침해] 아동에게도 사생활이 있다. 복장 제한, 학업 성적 공개, 동의 없는 소지품검사 등 사생활 침해를 멈춰라.				○
10. [씹히지 않을(들릴) 권리] 규칙과 법을 바꿔 아동이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없이 말하게 하고, 들었으면 적극 반영하라.		○	○	○
11. [죽게 두지 않을 의무] 너무 많은 아동이 죽고 있다. 그것도 자살로. 자살에 영향을 주는 환경(가정, 학교 등)적 원인을 제대로 찾고 대응하라!			○	○
12. [청소년노동인권] 일하는 청소년도 노동자다. 최저임금 등 노동기준을 지키고 노동환경을 개선하라. 억지로 일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들어라.	○		○	○
13. [쉽과 놀이] 어떻게 종일 공부만 하니?! 사교육 줄여라. 쉬는 시간, 놀이 시간 늘려라.		△	○	○
14. [난민/이주 아동] 국내 아동과 동등하게 사회보장, 교육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라. 난민과 이주 아동을 함부로 가두지 마라.		○	○	○
15. [이름을 가질 권리] 부모의 체류자격, 결혼 여부 등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은 태어남과 동시에 등록되고 이름을 가질 권리가 있다.			○	○
16. [예산 빨랑 확대] 국가 예산은 다 어디로 가고 있나? 경제수준에 비해 아동 예산이 너무 적다. 예산을 대폭 빨랑빨랑 늘려라!	○	○	○	○
17. [범죄 피해 아동] 범죄 피해 아동을 두 번, 세 번 괴롭히지 말라. 반복 진술, 합의 강요를 방지하고 피해아동에게 친절한 절차를 만들어라.			○	
18. [무상교육 확대] 무상교육은 국가의 의무다! 경제형편에 상관없이 공교육에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무상교육을 확대하라.		○		○


유엔아동권리협약 채택 30주년 맞이 여론조사
정부가 외면한 유엔의 경고들

 긴급재난문자

긴급재난문자
[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9년 오늘,
대한민국 어린이·청소년 인권침해 재난 수준 우려!
23년간 거듭 경고한 내용을 즉각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메모

**유엔이 보내온 경고들 중 정부는 계속 무시했지만
우리 마음에는 쏙 드는 문장을 뽑아주세요!**
우리들의 목소리로 정부에 다시 들려주려 합니다.
조사결과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채택 30주년을 맞이하는
11월 20일 즈음에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됩니다.

 미리 알림

- 조사 기간 : 11월 1일(금)~11월 14일(목)
- 참여 자격 : 누구나
- 참여 링크 : 구글 링크 주소
- 깜짝 선물 : 참여하신 분 중 추첨하여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1. 제정연대 소개

1) 결성 취지

2016년 겨울부터 2017년 봄까지,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함께 외쳤던 청소년들을 기억한다.

촛불청소년들이 우리 정치에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왜 아직도 시민이 아닌가요?”

촛불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에 묻는다.

“우리의 인권을 보장하는 법은 대체 어디에 있나요?”

“청소년 정책은 왜 다들 통제 중심인가요?”

촛불청소년들이 우리 교육에 묻는다.

“이것이 민주공화국의 학교입니까?”

“민주주의의 새 역사를 썼다는 ‘촛불’ 이후에도, 세월호 참사를 겪고 난 지금에도 학교에는 왜 인권과 민주주의를 찾아보기 힘든가요?”

“학생인권조례조차 없는 지역의 학생은 인간도 아닌가요?”

촛불청소년의 물음에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답할 때이다. 이를 위해 전국 각지의 단체들과 청소년들이 모여 2017년 9월 26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를 결성했다.

2) 주요 목표



“2018 지방선거를 청소년이 참여하는 첫 번째 선거로 만들자!” “청소년인권, 이제는 국회가 답하라!”

청소년, 입시공부가 아닌 정치를 통해 삶을 바꾸자

청소년에게 선거권·피선거권·정치표현의 자유·정당활동의 권리·주민발의권을 보장하라

만18세는 너무 늦다, 청소년을 유권자로

선거/피선거권 연령 기준을 만18세 미만으로 하향하라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OECD 꼴찌에서 벗어나자

어린이·청소년 인권목록과 인권보장체계를 담은 어린이청소년인권법을 제정하라

학교는 민주공화국이(어야 한다)

학생인권침해행위 명시,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교육청에 권리회복기구 설치 의무화 등을 포함하는 학생인권법을 제정하라

3) 왜 ‘촛불청소년인권법’이라 부르나?

- ‘광장의 시민’, ‘광장의 동료’로 함께 촛불을 들었던 청소년을 기억한다.
- 청소년 인권을 억압하고 청소년을 시민에서 배제해온 현실도 청산되어야 할 ‘적폐’이다.
- 청소년 참정권을 비롯한 청소년 인권 보장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일부 청소년의 폭력사건이 청소년인권을 유보할 이유가 될 수 없다..
- 촛불에 함께했고 촛불을 기억하는 시민들의 힘으로 촛불에 함께했던 청소년들의 외침에 ‘촛불청소년인권법’으로 답해야 할 때이다.

2. 촛불청소년연대 조직 현황

1) 참여단체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참여단체(2019.08.30 현재 374개 단체 가입, 굵은 표시는 연대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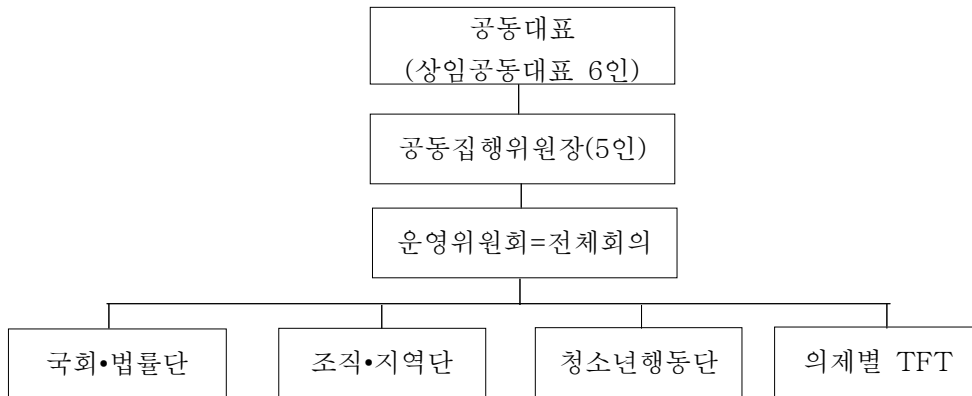
경남교육연대(거제교육연대, 경남진보연합, 경남참교육동지회, 김해교육연대, 마산YMCA, 민주노총경남본부, 어린이책시민연대경남지부, 전구교수노조부산울산경남지부, 전교조경남지부, 전국방과후학교강사지부경남지회,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경남지부, 진주교육사랑방, 참교육학부모회경남지부)/ **경남청소년네트워크**(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밀양지부, 청소년바보회)/ 교육공동체 나다/ 교육공동체 벗/ 광주인권지기 활짝/ 녹색당/ 녹색당 서울시당/ **대전청소년인권네트워크**(교수노조대전충남지부, 대전YMCA, 대전광역시인권센터, 대전교육연구소, 대전교육희망네트워크,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인권연대, 대전평화여성회, 대전학부모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전충청지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대전지부, 양심과인권-나무, 여성인권티움, 전교조대전지부, 참교육학부모회대전지부)/ **대학입시거부로삶을바꾸는 투명가방콘**/ **대한청소년연맹**/ **대한청소년연맹** 호남지역위원회/ 문화행동 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교육청소년위원회, 아동인권위원회, 대전지부, 전북지부)/ 민주청소년연대/ 사단법인 두루

/ 사)들꽃청소년세상/ 사)징검다리교육공동체/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복지법인 함께걷는아이들/ **서울교육단체협의회** (교육을생각하는시민모임,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 노원도봉교육공동체, 사학을바로세우려는시민모임, 서울지역아동센터협의회, 서울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시민모임 즐거운교육상상, 어린이책시민연대서울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서울교육청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서울본부, 전국교육공무직노동조합서울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서울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서울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서울지부, 참교육전국학부모회서울지부, 크레파스원정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세이브더칠드런/ 어린이문화연대/ 어린이책시민연대/ 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 이리이고 인권동아리 마중물/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정책연구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사회교사모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교조 대구지부/ 전교조 세종지부/ 전교조 인천지부/ 전라북도청소년행동 동행/ **전북교육개혁과교육자치를위한시민연대**(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전국공공운수서비스노동조합전북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북교육청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북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북지부, 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북지부, 전북교우회, 전북교육마당, 전북교육연구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참교육학부모회 북지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북학부모회) / **전북인권교육센터**/ **전북인권교육연구회**/ **전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정의당예비당원협의회 '허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교육학부모회 거제지회**/ **참교육학부모회 경주지회**/ **참교육학부모회 고양지회**/ **참교육학부모회 광양지회**/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참교육학부모회 구미지회**/ **참교육학부모회 김제지회**/ **참교육학부모회 김포지회**/ **참교육학부모회 김해지회**/ **참교육학부모회 나주시회**/ **참교육학부모회 대구지부**/ **참교육학부모회 대전지부**/ **참교육학부모회 마창진지회**/ **참교육학부모회 목포지회**/ **참교육학부모회 부산지부**/ **참교육학부모회 상주지회**/ **참교육학부모회 서산태안지회**/ **참교육학부모회 서울남부지회**/ **참교육학부모회 서울동북부지회**/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서부지회**/ **참교육학부모회 성남지회**/ **참교육학부모회 세종지부**/ **참교육학부모회 수원지회**/ **참교육학부모회 안양지회**/ **참교육학부모회 영암지회**/ **참교육학부모회 의왕지회**/ **참교육학부모회 의정부지회**/ **참교육학부모회 전주지회**/ **참교육학부모회 정읍지회**/ **참교육학부모회 진주시회**/ **참교육학부모회 천안지회**/ **참교육학부모회 파주시회**/ **참교육학부모회 포항지회**/ **참교육학부모회 흥성지회**/ **참교육학부모회 화순지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년민중당**/ **청년좌파**/ **청년참여연대**/ **청사총통-더불어민주당 청소년지지도포럼**/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반딧불이**/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핑통**/ **청소년인권복지센터 내일**/ **청소년인권연대 추진단**/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 **청소년주권회의**/ **청소년 트랜스젠더 해방으로** **나아가는** **틀립연대(준)**/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Wetee)**/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강원연대**(강릉시민행동,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강원영동지역노동조합동해시노인요양원지부, 강원영동지역노동조합동해화력지부, 강원영동학교인권교육연구회, 강원영서학교인권교육연구회, 공공운수노조금강고속지회, 내일을여는속초시민연대, 노동당 강원도당, 녹색당강원도당, 더불어민주당동해삼척지역위원회, 동해시민공동행동, 동해시민공동행동모임, 민주노동총합동일반노동조합, 민주노동총합동지역지부, 민주노동총합동영동지역노동조합, 민주노동총합동영동지역노동조합삼표지부, 민주노동총합동지역본부, 민주노동총합동삼척지역지부, 민주노동총합동초지역지부, 민주노동총합동지역지부, 민주노동총합동천시협의회, 민중당동해삼척지역위원회, 변혁당강원도당, (사)속초여성인권센터, 삼척학습실현연대, 속초경제정의실천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속초시민노동단체연대, 속초여자고등학교학생회, 인제군설악산배움터, 전국공무원노동조합강원도교육청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강원지역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속초시지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강원지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홍천지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강원지부, 전국농민회강원도연맹,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속초지부, 전국민주일반연맹, 전국보건의료노조속초의료원지부, 정의당강릉시위원회, 정의당강원도당, 청소년의행동하는양심, 춘천시민연대, 춘천평화나비, 평등교육실현을위한강원학부모회, 흥천골프장대책위, 흥천농민회, 흥천군시민사회연석회의, 흥천군여성농민회) /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경기연대**(경교육희망네트워크, 경기도인권교육연구회, 노동당 경기도당, 녹색당 경기도당, 다산인권센터, 민중당 경기도당 청소년위원회, 부천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노랑, 부천청소년단체설립준비위 세움, 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 인권교육 온다, 전교조 경기지부, 정의당 경기도당, 참교육학부모회 경기지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수원지부, 평등교육실현을위한경기학부모회) /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경북연대**(경북장애인부모회, 경북혁신연구소 공감, 노동당경북도당, 녹색당경북도당, 민주노동경북본부, 민중연합당경북도당, 능동경북도연맹, 전교조경북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경북교육청지부, 전국교수노조대경지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경북지부, 전국대하노조대경지부, 전국여성노조대경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경북지부, 정의당경북도당, 참교육학부모회경북지부) /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부산연대**(꽃길메이커, 나래(은새미학교, 우다다학교, 참빛학교),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 청소년겨레하나, 금샘마을공동체, 나눔수레, 노동당부산시당, 녹색당부산시당, 맨발동무도서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산지부, 민중당 부산시당, 부산다행복학교, 학부모네트워크, 부산민예총, 부산사회복지연대, 부산생활협동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회, 부산인권상담센터, 부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 부산참여자치연대, 부산학부모연대, 사단법인 열린네트워크, 사회변혁노동자당부산시당, 어린이책시민연대 부산울산지부, 전교조 부산지부, 정의당 부산시당, 참교육학부모회 부산지부, 창조어머니회, 책과아이들, 부산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한살림, 햇살나무도서관, 희망세상) /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울산연대**(교육공무직노동조합울산지부, 민주노동울산지역본부, 어린이책시민연대울산지회, 울산교육연구소, 울산교육희망학부모회, 울산시민연대, 울산여성의전화, 울산여성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장애인부모회, 전교조울산지부, 참교육학부모회울산지부, 청소년문화공동체 함께, 풀뿌리주민연대, 울산부모교육협동조합,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울산지부) /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전남연대**(노동당전남도당/ 녹색당전남도당/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목포중고등학생회연합회/ 목포환경운동연합/ 민중당전남도당/ 어린이도서관연구회전남지부/ 어린이책시민연대전남지회/ 여수YMCA/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남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남지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남지역본부/ 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남지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남지부/ 전남교육희망연대/ 전남무지개학부모네트워크/ 전남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정의당전남도당/ 지역아동센터전남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전남지부/ 푸른나무청소년폭력예방재단전남지부/ 학교비정규직노조전남지부/ 한국해양소년단전남서부연맹) /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제주연대**(전교조 제주지부, 제주교육희망네트워크, 제주청년네트워크, 제주지역아동센터 우리동네, 참교육학부모회 제주지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아름다운청소년이여는세상) /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충북연대**(공공운수노조교육공무직본부충북지부/노동당충북도당/민중문제연구소충북지부/민주노동총합지역본부/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충북지회/민중당충북도당/보은민들레희망연대/사회변혁노동자당충북도당/생태교육연구소'터'온갖문제연구실/우리의소원은/이주민노동인권센터/인권연대숨/전국공무원노조교육청본부/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충북지부/전국공무원노조

충북교육청지부/전국공무원노조 충북지역본부/전국교수노조 충북지부/전국교직원노조충북지부/전국농민회총연맹충북도연맹/정의당충북도당/청주YWCA Y-틴협의회/청주노동인권센터/청주도시산업선교회/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청주YMCA/충북교육발전소/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충북사람연대/충북장애인부모회/충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충청평화나비네트워크/태고종노동인권위원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충북학부모회/ **충남청소년인권**+(노동당 충남도당, 녹색당 충남도당, 민주노동충남세종본부, 사회변혁노동자당 충남도당, 서산인권모임 꿈틀, 아산시시민사회단체협의회, 아수나로 충남지부, 어린이책시민연대 충남지부, 전교조충남지부, 전농충남본부, 정의당 충남도당, 참교육학부모회 충남지부,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들, 충남청소년인권연합회 인연, 평등교육실현을위한학부모회 충남지부, 청양시민연대, 흥성YMCA) /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택여고 자율동아리 MeForYou/ 피스모모(평화교육프로젝트 모모)/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다양성연구소/ 한국인권행동/ 한국청소년정책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흥사단교육운동본부/ 희망을만드는법/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및 참여 개인들

※ 지역제정연대 출범 지역 : 강원, 경기, 경북, 부산, 울산, 전남, 제주, 충북

2) 조직체계



- 공동대표 : 참여단체의 대표자 전원으로 구성
- 상임공동대표 : 광노현(사)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 권리모(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권정오(전교조 위원장), 김수정(민변/법무법인 지향), 나명주(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 이주영(어린이문화연대 대표)
- 공동집행위원장 : 미소지음(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준), 배경내(인권교육센터 들), 서채완(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이운경(참교육학부모회), 장영인(전교조)
- 국회·법률단 : 법률안 마련, 국회정부 대응, 입법과정 모니터 등
- 조직·지역단 : 단체별·지역별 활동 지원과 소통, 시민 참여 토론회·강좌 등 기획
- 청소년행동단 : 청소년 당사자들의 직접행동 기획, 청소년 참여 조직
- 의제별 TFT: 의제별, 시기별 상황에 따라 특별 태스크포스팀 구성하여 운영

3. 촛불청소년인권법의 구체적 내용

1)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위한 법 개정

¶ 문제점

- 촛불의 힘으로 바뀐 정권 하에서도 함께 촛불을 들었던 청소년은 투표조차 할 수 없다.
- 세계 대다수 나라가 18세 투표권을 선택했고, 더 낮추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16세까지 참정권을 보장한 정치선진국도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매우 후진적이다.
- 만18세 투표권을 공약한 정권이 들어섰지만, 정치적 거래로 그조차도 차일피일 미뤄질 우려가 있다.
- 만18세로 투표연령이 낮아져도 청소년의 극히 일부만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만18세는 너무 늦다.
- 청소년 참정권이 없기에 정치인들이 청소년 인권에 무관심하다.
- 청소년이 정치에 대해 의견을 밝히고 모이고 정당활동에 참여할 당연한 권리가 불법으로 취급되고 있다.

¶ 우리의 목표

- 청소년이 투표할 수 있는 나라, 청소년 정치인이 있는 나라, 청소년도 자기 삶에 필요한 법을 발의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든다.
- 입시공부가 아니라 정치를 통해 삶을 바꿀 기회가 청소년에게 주어져야 한다. 청소년 시기는 민주주의를 단지 훈련하는 나이가 아니다.
- 만18세 너무 늦다. 선거연령을 얼마나 낮출 수 있느냐가 그 나라 민주주의의 역량을 보여준다. 만18세 투표권을 넘어 더 많은 참정권을 확보한다.
- 청소년이 비청소년에 의해 대변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이 스스로 대표가 될 수 있어야 한다.
- 2018년 지방선거를 청소년이 참여하는 첫 번째 선거로 만든다.

¶ 우리의 요구

- 청소년에게 선거권, 피선거권, 정치와 선거에 대해 말할 권리,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선거법, 정당법을 개정하라!
- 선거권/피선거권/주민발의/주민투표 연령을 만18세보다 더 낮추어 선거법, 지방자치법, 지방교육자치법, 주민투표법을 개정하라!

2) 어린이·청소년인권법 제정

¶ 문제점

-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가 OECD 국가 중 연속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 학교, 학원, 복지시설, 쉼터, 알바현장, 지역사회 등에서 학대, 성폭력, 착취, 모욕 등이 이어지고 있지만, 법적 보호막은 취약하다.
- 어린이·청소년의 학습시간은 OECD 국가 중 최장시간으로 학대수준이다. 놀 권리, 쉼 권리, 사회에 관심을 갖고 행동할 권리,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보호를 받을 권리 등이 빼앗기고 있다.

- 기존 법률은 청소년에 대한 통제 위주의 내용만 담고 있다.
-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가입(1991년)한 지 30년이 다 되어 가지만, 모든 어린이·청소년의 삶을 관통하는 통합법 하나 없다. 담당부처가 산재해 있어 통합적 정책이 부재하다.

¶ 우리의 목표

-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OECD 꼴찌에서 벗어나자.
- 모든 어린이·청소년이 ‘사회가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지지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든다.
-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어린이·청소년 인권법이 있는 나라, 어린이·청소년 관련 법과 정책의 기본이 인권이 되는 나라를 만든다.
- 어린이·청소년 내부의 차이에 주목하고, 소수자인 어린이·청소년이 차별적이고 위험한 상황에 내몰리지 않도록 한다.
- 문재인 정부의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 공약이 헛된 약속이나 허울뿐인 약속이 되지 않도록 만든다.

¶ 우리의 요구

- 어린이·청소년인권법을 기본법으로 제정하라!
- 어린이·청소년의 구체적이고 통합적인 인권 목록을 밝히고 국가는 이를 보장하라!
- 폭력, 착취, 차별로 고통받는 소수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어린이·청소년인권법을 제정하라! : 보호자의 폭력을 피해 집을 나온 난민청소년, 청소년 알바노동자, 시설거주 청소년 등
- 인권보장체계를 포함한 실효성있는 어린이·청소년인권법을 제정하라! : 핵심부처 지정, 아동·청소년 인권정책 수립 의무, 인권영향평가 도입, 권리회복기구 설치, 피해자 지원책 등

3) 학생인권법 제정(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 개정)

¶ 문제점

- 현장실습생의 자살, 여학생 성폭력, 교사에 의한 학대폭행, 과도한 복장·지품 단속, 촛불집회 참여 제지, 보충과제 강요 등 학생인권이 침해되는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 학생회의 법적 지위가 허약하고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는 참여조차 할 수 없다.
-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역은 경기, 광주, 서울, 전북 단 네 곳뿐이다.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지역에서는 학생인권 수준이 더욱 열악하다.
-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역도 조례의 법적 지위가 약하다 보니 위반하는 학교들이 많다.
- 학생·청소년 인권에 반대하는 세력과 이에 동조하는 지방의회와 교육청으로 인해

학생인권조례, 청소년노동인권조례 등 인권조례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가로막히고 있다.

¶ 우리의 목표

- ‘가장 인권적인 것이 가장 교육적이다.’ 인권 없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다. 학생을 존엄한 인간이자 시민으로 대접하는 학교를 만든다.
- 우리에게서 민주공화국의 학교가 필요하다. 학생에게 시민권을 보장하자.
- 학생인권조례에서 학생인권법률로! 지역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학생이 인권을 누리고 인권의 가치를 익힐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만든다.
- 2018년 교육감 선거에서 학생인권 공약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힘쓴다.

¶ 우리의 요구

- 학생인권 목록 및 학생인권 침해행위를 법률에 명시하라! : 체벌, 두발복장검사, 소지품검사, 차별행위, 보충학습강요, 서약 강요 등
- 학교운영 및 학칙 제·개정시 학생 참여를 보장하라! : 학생총회 및 학생총투표 제도 마련,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위원 참가, 학칙 제·개정시 학생총회 동의절차 명시
- 모든 교육청에 학생인권 침해행위에 대한 회복기구와 절차를 마련하라! : 학생인권 옹호관과 학생인권센터 설치, 구제절차 명시 등